

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(12.23)

-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,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습니다.
- 정부는 민생 회복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.
 - 소비·관광·건설 등 내수 부문별 정책처방을 통해 소상공인, 근로자,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.
 - 청년, 중고령층, 소상공인, 취약근로자 등 취약계층별로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, 먹거리·주거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.
 -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'예산집행 속도전'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.
 -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최대한 시행하고 집행규정을 적극 완화해서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필요한 국민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.
 - 정부 예산과 함께 공공기관 투자, 정책금융 등 공공부문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하겠습니다.
- 이러한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해 다음주 초 「2025년 경제정책방향」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.
 -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에 '따스함'을 담겠습니다.
 - 경제팀 모두가 각고면려(刻苦勉勵)의 자세로 현장에서 정책이 바로 체감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.

[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]

[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]

□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,
근본적인 산업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.

- 지난번 ‘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’를 통해
반도체와 항공·해운물류 분야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,
- 오늘은 석유화학과 건설분야의 경쟁력을
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

□ 글로벌 과잉공급인 석유화학산업은
사업재편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
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있는 상황입니다.

- 우선, 정부는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
사업재편과 친환경·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.

-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*을 적극 검토하고,
「기업활력법」상 사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**하겠습니다.

* 산업특성 반영하도록 지정요건 개선, 고용유지지원금·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확대

**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 연장, 과세이연 연장(선제대응지역 한정) 등

- 내년 중 LNG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*하는 한편,
첨단·저탄소 소재 R&D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.

* 공업원료용 LNG 대상

- 후속대책 수립에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.

- 내년초 업계 중심으로 사업재편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,
이를 통해 도출된 원칙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게
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.

- 다음으로, 건설산업이 활력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시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.
-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여 주요 국책사업의 공사지연 사례를 최소화하겠습니다.
 - 불합리한 저가 수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공사비를 감안하여 낙찰률 상향조정을 유도*하겠습니다.
 - *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 시 단가심사 범위 축소(100억원 이상 공공공사)
 -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상승분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보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편*하겠습니다.
 - * (현행) GDP 디플레이터,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값 적용
→ (개선) 원칙상 GDP 디플레이터 + 양 지수 증가율 차이가 4%p 이상인 경우 평균값 적용
- 민간 건설시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.
 - PF 보증 규모를 현행 35조원에서 40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, 시장안정 프로그램(90조원+α)도 지속 가동할 계획입니다.

[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녹색분류체계 보완]

- 한편,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이를 산업정책과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.
- 이에 발맞춰, 정부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기준을 더욱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‘한국형 녹색분류체계’를 개정합니다.
 - *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자발적 지침
- 지하 시설물 공사 등으로 유출된 지하수의 활용, 실내 공기질 정화 등 10개의 녹색경제활동을 추가합니다.
-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친환경 사업과 기술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
-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장관, 국토부 장관, 환경부 장관이 말씀하시겠습니다. (산업부 장관, 국토부 장관, 환경부 장관 모두발언)
-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